

광주·전남 국감 현장

“외고 문제 후임 교육감에 넘길 의향 없나”

■ 광주시교육청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전남,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심한 듯 외교 설립에 따른 공교육 붕괴, 학교·학생 서열화, 지정절차의 부당성, '비리사학'에 대한 외교 지정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외고설립으로 사교육비 증가, 교육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사안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교육감이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사학비리의 결정판인 대광여고를 외교로 지정된 것은 졸속 심사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이 취임에 따른 광주 교육계의 혼란을 우려한 지적도 나왔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등의 과정에서 교육계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광주교육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임 교육감에게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외고) 문제를 넘길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안순일 교육감은 “외고 지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상 큰 문제가 없고 현재 교과부에 지정 협의가 서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교육청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진땀을 뺐다.

‘장만채 신문고’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감 당선 이후 ‘(당선 축하금 성격의)돈봉투를 전달하려던 공무원이 있었다’는 자신의 발언 때문이었다.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보충질의에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장만채

신문고’에 교육감 이름을 붙인 것은 사전 선거 운동 여지가 있다”며 “(선거법상)주광덕 국회의원 촉구대회’는 불가하고 국회의원배 촉구대회만 가능하다”며 선관위에 알아보라고 충고했다. 돈봉투 사건 처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장 교육감이 감사에 나선 교과부에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회신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으로서 범죄사실을 고발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만채 신문고’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

■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의 도덕성 해이와 허술한 감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국립대 교직원들의 비리와 비위를 질타하는 한편 국립대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 32건이 적발됐다”면서 “강간, 학생 성희롱, 논문 표절 등 상식적

로 국립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학의 개선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년 동안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교수,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면서 감사원 담당인력을 배정하는 등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

을 주문했다. 유성업(무소속) 의원은 “교수가 조교와 함께 수천만원의 공금을 부당사용했지만 학교 감사에 적발되지 않고,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학원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교직원 비리·비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 김윤수 총장은 시종일관 “잘못된 만큼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보고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격려하는 등 국감현장은 팽팽하고 긴장감이 감돌기 보다는 다소 맥빠진 모습을 연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연구비 유용·공금 부당사용 등 질타

■ 영암 F1

포틀러인(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 1주일을 앞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암 F1경주장을 찾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7명 가운데 정병국 위원장 등 20여명은 이날 영암 서킷을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경주장을 둘러보며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F1대회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특히 국비지원과 교통·숙박대책, 티켓판매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비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의원들은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다”며 “서울에서는 열리는지도 잘 모른다. 외형적인 것보다

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6만~7만명이 관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 숙박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매년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액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정부 지원 352억원도 확보하지 못해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3~4년이 고비인데 2년은 적자를 감수하고 3년째부터는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6만~7만명 관람 교통·숙박 우려된다”

시설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 치는 호남경제

호남지역 경제상황을 가늠할 각종 소독지표를 보면 웬지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지표 자체가 전국 최하위인데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의 연간 1인당 평균 급여액이 3610만원으로, 2008년의 3885만원 보다 275만원(7.1%)이나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크다.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전체 법인의 소득(6조7375억원)과 1개 법인 당 평균 소득(1억7600만원)도 모두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지역 법인 소득(16조8235억원)과 1개 법인 당 소득(5억3500만원)이 호남지역 법인의 2.5~3.1배에 이른다 하니 말문이 막힌다.

경제상황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인구 역시 지난 1949년 509만명에서 2009년 520만명으로 60년 동안 11만명 증가에 그쳤고 소득 감소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전국의 인구 감소비율도 가장 높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호남지역에 대기업이 별로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저임금에,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경제적인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 데도 역대 정부가 방치해 왔고 현 정부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체감경기와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의 회생과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차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상공인 역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모두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 벼 수매대란 두고만 볼 건가

쌀 재고 급증과 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이번에는 벼 수매 대란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가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하는 바람에 수확철을 맞아 한꺼번에 쏟아지는 벼 수매 벼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통합 RPC는 광주농협의 광산구 분장과 남구 대촌 등 2곳이다. 이들 RPC는 당초 분장과 대촌 농협 조합원의 벼만 수매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영개선을 이유로 분장과 대촌 RPC에 대해 광주지역 관내 14개 농협 조합원의 벼를 모두 수매도록 유도했다. 시설규모나 처리능력은 그대로두면서 수매량만 대폭 늘린 것이다. 벼 수매 대란은 이미 예고된 셈이다. 실제로 이들 2곳의 가공 능력은 시간 당 각각 5t에 불과한데 비해 수확철인 요즘 매일 130여t의 물벼가 수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벼를 수매하기까지 평균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농민들의 수송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RPC 주변은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수매 중단 이후 유일한 벼 수매처인 농협RPC에서마저 수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벼 재배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RPC의 경영개선보다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광주시는 통합RPC의 시설 규모를 수요에 맞게 확충하는 것은 물론 농민이처럼 불어나는 재고 쌀의 처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당 각각 5t에 불과한데 비해 수확철인 요즘 매일 130여t의 물벼가 수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벼를 수매하기까지 평균 2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농민들의 수송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RPC 주변은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수매 중단 이후 유일한 벼 수매처인 농협RPC에서마저 수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벼 재배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RPC의 경영개선보다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광주시는 통합RPC의 시설 규모를 수요에 맞게 확충하는 것은 물론 농민이처럼 불어나는 재고 쌀의 처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주·참여당 지도부, 서구청장 재선 지원 유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지도부가 주말인 16일 광주를 방문해 서구청장 재선거 지원 유세전을 펼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16일 서구 상무역 앞에서 김선옥 후보 지원유세를 벌인 뒤 서구 풍암저수지와 양동시장을 잇달아 방문한다. 손 대표 등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투명하고 신선한 행정을 펼칠 준비가 돼 있는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취익 및 김선옥 후보 지원유세 차 16일 광주에 내려오는 손 대표는 17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김 후보에 대해 지원유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이백만, 천호선 최고위원도 16일 광주를 방문해 서대석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 이 대표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서 후보가 역동적이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책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7일 광주를 방문해 서 후보 지원유세를 한다. 한편, 서구청장을 역임한 무소속 김종식 후보는 주말과 휴일 서구 일대를 누비며 “행정은 행정에게 맡겨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시의원 출신인 무소속 박금자 후보도 참신한 행정을 선보이겠다며 유세를 통해 표방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제1전비 주관 한미 공군 대규모 훈련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전 훈련이 6일간 일정으로 15일 시작했다. 훈련에는 최신식 F-15K와 KF-16, F-4E 전투기, C-130 및 CN-235 수송기를 비롯한 미측의 F-16 등 50여대가 참가했다. 미 F-16은 메릴랜드, 알래스카 등 본토에서 출격했다. 한국측 주도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 적기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해 양국 공군이 대규모 공격편대군을 이루어

공중전을 벌이고 타격 목표에 대한 전술폭격으로 진행된다. 훈련에는 최신식 F-15K와 KF-16, F-4E 전투기, C-130 및 CN-235 수송기를 비롯한 미측의 F-16 등 50여대가 참가했다. 미 F-16은 메릴랜드, 알래스카 등 본토에서 출격했다. 특히 적기 역할을 전담하는 미 공군 354 비행단 18대대가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

빛日만평

- 김종두



기다리면 기적(?)이 올수도 있다

신안 천일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배타적 권리 확보 차별화 가능

신안 천일염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외국산과 다른 지역 천일염과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자료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통해 지난 5월 특허청에 출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신안 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신안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안 천일염'은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저가 외국산 소금의 신안 천일염 둔갑 방지는 물론 상표가치 상승으로 생산자의 소득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포장재 디자인 및 상표 개발을 하고 신안 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등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